진실에 오르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무등산, 2000종 넘는 야생 동·식물 보고 ▶2
중국發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부실 ▶6
광주·전남 고교 내년 수업료 동결 ▶7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630호 1판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음력 11월 4일)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내년도 F1 공식 일정에서 제외된 5일 오후 텅빈 영암 F1경주장에서 한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F1 내년 대회 결국 무산

개최권료 협상 결렬…WMSC 내년 일정 제외 '존폐 기로'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

조직위 "2015년 대회 재개"…전남도의회 예산 전액 삭감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가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지난 2010년부터 4차례 대회를 개최하면서 1900억원대에 달하는 적자 논란을 낳았던 F1은 휴식기를 가지면서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

반면, 2015년 이후 대회를 치르더라도 운영사인 FOM과 처음부터 개최권료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등 대회 재개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관련기사 3면〉

5일 전남도는 "국제자동차연맹(FIA) 산하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WMSC)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F1 일정(캘린더)에서 한국 대회를 최종적으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을 돌며 대회를 치르는 F1은 공식 캘린더에 일정을 표기하는데 여기에서 빠졌다는 것은 FOM측이 최종적으로 한국대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WMSC가 이날 확정발표한 2014년 F1 개정 캘린더에 따르면 내년에는 3월16일(결선 기준) 호주 대회를 시작으로 11월23일 아부다비까지 19개 대회로 치러지며 애초 초안에 포함됐던 22개 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 멕시코 등 3개국은 빠졌다.

이는 전남도와 FOM의 개최권료 협상 결렬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4370만 달러(463억원)에 이르는 개최권료를 2000만 달러(212억원)로 대폭 인하하지 않는 한 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FOM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FOM측이 그동안 10월에 열렸던 대회를 내년에는 4월에 개최할 것을 요구해 전남도가 반발했었다.

내년 대회 일정에서 한국 대회가 빠졌다고 해서 영원히 한국에서 F1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재협상을 통해 2015년 다시 대회를 열거나 몇 년을 더 쉬고 대회를 재추진해도 된다. 실제, 인도와 멕시코 등이 각각 1년, 20년 동안 대회를 중단했다가 복귀한 경우도 있었다.

또 내년 대회가 취소되면서 총 7차례 대회를 치르기로 했던 애초 계약과는 달리 6차례만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올해까지 4년 연속 4차례 대회를 열었고, 내년 대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남은 2차례만 더 개최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면 F1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개최권료를 깎지 않고는 적자폭을 줄일 수 없는데 FOM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미 개최권료를 두 차례 인하해준 FOM이 다른 개최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재협상시 인하된 가격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개최권료를 논의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초기 700억원이던 적자를 4분의 1로 줄였고, 한 해 16만명이 다녀가는 등 F1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400억원에 달한다"면서 "FOM의 요구대로 4월에는 대회를 도저히 치를 수 없어 차라리 한 해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F1 내년 대회가 무산되자 이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남도가 요구한 개최권료 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향후 F1 대회 개최를 위해 37억원의 예산을 F1 대회 대응 및 지원 명목으로 신규 반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2013년
12월19(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한·호주 FTA 타결…축산업 타격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쇠고기 2030년 완전 개방

농민·축산단체 "생존대책부터 마련해 달라" 반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하루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양국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2015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쇠고기 시장은 2030년께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조건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와 철강·에너지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호주산 쇠고기와 낙농품의 관세장벽이 낮아지면 국내 축산물 시장과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호주와 농축수산 분야 교역액은 29억9300만 달러. 수입액은 28억8000만 달러에 달하지만, 수출액은 1억600만 달러에 그쳤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축 육류 수입금액은 7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실제 농식품부도 국내 한우 가격 폭락 등을 우려해 협상결과를 토대로 농가 피해를 분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규 사업 등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뉴질랜드와도 곧 FTA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캐나다와 뉴질랜드 역시 축산강국인 점을 고려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3개국 FTA의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호주산 쇠고기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철폐되면 큰 피해가 자명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한·호주 FTA 체결로 국내 축산 농가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지경"이라며 "개방에 앞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생존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또 "한·호주 FTA는 농가와 연결되는 파생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국내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공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만큼 최종 타결될 경우 대정부 투쟁은 물론 동조한 국회의원에 맞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서발 KTX, 코레일 자회사로 출범

철도발전최종안…철도노조·시민단체 "민영화 꼼수"

서울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지난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 추진을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안이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 철도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출자지분도 애초 정부 안이 코레일이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지분을 11% 확대해 41%로 늘리고 공공자금 비율을 59%로 확정했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철도노조 측은 "이번 발표는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매도 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해 민영화 논란을 막았다는 코레일 경영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은 오는 9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영화를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TX 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수서 발 KTX 분할과 철도 민영화, 매국적인 철도업 해외매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 민영화 꼼수"라며 "철도공사는 이로 인해 연간 4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며 8개 지방노선 및 화물수송·차량정비·시설유지보수 회사 등이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12월호
11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